2020. 11. 09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매일경제

기사링크

(요 약) 바이든, 美 기후리더십 정상화 나선다

-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향후 70여일내 재가입 약속..2조 달러 규모 친환경 정책계획 발표
-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판단...공약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관심

미국 대통령 당선을 목전에 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미국의 기후리더십 정상화에 착수**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 시되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향후 70여일내 재가입을 약속한 상태다**. 미국의 기후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공식적으로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철수했다"며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저지할 2조 달러 규모 친환경 정책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또 기후대응 정책과 관련,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 수단을 이용해 세계 각국이 미국과 함께 기후목표를 세우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국이 기후목표 달성을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부정확한 목표와 이행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늉만 내는 국가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트럼프는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며 기후변화를 부정해 왔다. 환경보호법과 기후관련 정책들을 철수하거나 축소했. 특히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지구평균기온 2도 상승을 막기 위해 189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국이 저감노력과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바이든 친환경 정책안 '의회설득' 변수

바이든 후보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조 달러규모 기후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 산업으로부터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연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공약을 미 의회에서 현실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기후법안이 통과되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의 현지 매체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36년 상원경험과 부통령 시절을 직접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의회를 설득하지 않고선 의지만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 체제가 시작되면 태양광과 풍력은 전폭적으로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만큼 흔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는 "석유산업은 오염됐다.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바이든 후보측 고문들은 "기후변화가 정치적 슬로건 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캠프는 이미 민주당 지도부와 몇가지 공약을 법제화 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척 슈너 민주당 뉴욕주 상원의원은 "우리가 꼭 진행해야 하는 세 가지 분야가 기후문제, 경제적 평등, 민주주의"라며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후문제가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의회설득은 큰 난관**이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경기 부양책 통과와 건강보험개혁법 통과에 돌입했다. 의회가 기후변화 관련 법안으로 아젠다를 옮겼을 때는 이미 백악관이 정치적으로 고갈된 상태였다. 낸시 펠로시 대변인이 2010년 하원에 탄소배출권 법안 승인을 요구했으나 상원 투표까지 가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필 쉬로 공보관은 "2010년 기후변화 법안 통과를 완성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은 건강보험개혁법이었다"며 "다른 중요한 일이 우선 과제로 등장하면 또 반복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바이든 후보의 기후 공약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기후 법안을 단독으로 세우지 않고 더 넓고 인기 있는 법안에 끼워 넣어 당파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2009년 통과된 미국 회복과 재투자법(7870억 달러)에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투자 900억 달러를 포함시켰던 방법이다.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수조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900억 달러는 "비교적 작게 보일 수 있다"고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시설법에 50만개 전기차 충전시설, 150만개 에너지효율주택 등 바이든의 기후 정책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기후 지출과 세금 정책 등 공공 지출 대책이 공화당의 충분한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화해 조정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절세 정책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일부를 '화해 조정'을 통해 밀어부쳤다.

한편, 일부 석탄가스 생산을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주들의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오바마 행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반대했지만 지난 10년간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 변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다. 존 테스터 민주당 몬타나 주 상원의원은 2010년 배출권 거래제가 몬타나 주의 농업과 석탄 산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기후 변화로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지켜 볼 수 밖에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바이든 후보의 맷 힐 대변인은 "풍부한 의회 경험을 통해 바이든 후보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했다. **바이든 후보는 2035년까지 전력 발전부문의 배출 제로화를 약속한 상태다. 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 수력, 원자력 발전 등 탄소 배출 제로 전력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청정 에너지 법안을 내놓았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 정책안들이 난관을 뚫고 어떻게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0. 11.09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기사링크

(요 약) 국회 본회의장·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으로 옮긴다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중... 청와대는 이전 대상 아님
- 국회 이전하고 난 뒤 비게 될 여의도 의사당 부지에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검토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진단이 주 중에 회의를 한 차례 더 한 뒤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올린지 3개월여 만에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보고서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이후 글로벌 경제수도로서의 서울의 비전, 그리고 권역별 다극체제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청와대와 국회 이전 여부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으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반의 반쪽도 완성되지 못한 채로 남았다. 이 때문에 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 비용은 550억원, 출장 횟수만 52만 1000회에 이르는 등 행정비용이 소모되기도 했다.

그동안 추진단은 국회 이전을 놓고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옮기는 안과 국회 전체를 옮기는 안 등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세종갑을 지역구로 둔 홍성국 의원 등 80명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본원을 아예 세종시에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 등 남기고 국민여론 수렴_위헌 해소될까

다만 국회를 완전 이전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상징적 공간인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은 남겨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만 서울에 남기면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종의사당이 국회 본원이 되며, 여의도 의사당이 분원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에서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서울에서 이뤄지는 경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를 이전하고 난 뒤 비게 될 여의도 의사당 부지에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전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과 국민 여론 모두 우호적이지 않아 청와대 이전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0. 11. 1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 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915631

(요 약) ESG에 꽂힌 국민연금…"2년내 자산 50% 투자"

-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도 ESG를 고려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할 것으로 밝혀, 글로벌 전략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
- 은행 등 금융회사는 ESG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 투자금 투입을 결정하느냐에 미래 경제 재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22 년까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반영한 자산을 전체 자산의 50%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 일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KB 금융그룹 주최 '2020 ESG 글로벌 서밋'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금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 년부터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때도 책임 투자 요소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직접 운용한 국내 주식은 71 조 6000 억원어치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는 26 조 9000 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에 맡긴 위탁운용 주식 가운데 ESG 투자는 5 조 1000 억원이다. ESG 를 고려한 자산이 현재 36 조원가량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전체 기금의 절반 정도인 400 조~500 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도 "ESG 를 고려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ESG 전략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책임 투자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금융·투자사들도 ESG 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호주 건설업계 퇴직연금기금 CBUS 의 크리스티안 포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한국이 선언한 '탄소 중립' 목표는 호주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ESG 가 많은 기업에 '파괴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피유시 굽타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최고경영자(CEO)는 "**은행 등 금융회사는 ESG 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라며 "투자금을 어디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계와 경제가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DBS 는 2024 년까지 200 억달러를 지속 가능 산업에 투자하는 등 ESG 에 일찌감치 많은 관심을 기울인 금융사로 꼽힌다.

2020. 11. 1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 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32646625964080

(요 약) 세계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탄소 15% 줄여야 투자하겠다"

- 블랙스톤은 투자심의 과정에서탄화수소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기업을 인수 조건으로 설정 계획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이 친환경을 강조하는 만큼 ESG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친환경정책을 앞세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기후 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향후 투자·인수하는 모든 기업 심사에 탄소 사용량을 15% 저감하는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전면 확대하는 정책이다. 국민연금도 책임투자 적용 자산 규모를 기금 전체 자산의 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 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 전력량을 줄이는 것이 수익성을 높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블랙스톤은 투자심의 과정에 탄화수소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기업을 인수 조건에 넣기로 계획했다"**며 "우리가 투자하고 인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해당 기업의 베이스 라인 대비 15% 감축 의지가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KIC) 등도 자산운용에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내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넓혀 해외주식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2022 년에는 책임투자를 5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투자시장에서 ESG 투자의 중요성은 커지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이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ESG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헨리 페르난데즈(Henry Fernandez)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회장은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면서 ESG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후변화와 팬데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해 전 세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고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20. 11. 11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매일경제

기사링크

(요 약) LG에너지솔루션·한화솔루션.. 바이든 시대서 '2400조' 금맥 캔다

- 바이든의 2조달러 그린정책,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에 수혜
- 반도체 산업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석유화학과 철강산업과 같은 전통에너지 분야는 어려움 예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내놓은 주요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바이든 당선에 따라 변화되는 친환경산업, 미중 무역분쟁, 대북전략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 저마다 이해득실 계산에 바쁜 모습이다.

우선 바이든의 '그린정책' 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수혜가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 에너지에 2조달러(2400조원)를 쏟아 붓겠다는 대선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미국 내에 태양광패널 5억개, 풍력터빈 6000만개를 새로 설치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용 송전망 건설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놨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미국시장을 공략해온 한화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미국 주거용 태양광 발전시장 점유율 22%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 국제표준 품질기준의 2~3배에 이르는 자체 품질 테스트를 거쳐 제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평가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말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하며 미국 태양광모듈시장 채비를 본격적으로 마쳤다.

반도체 분야는 전망이 엇갈린다. 바이든이 '미국인에 의한 미국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우는 만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분야의 경쟁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통에너지 분야인 정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된 반덤핑관세 등 철강분야에 대한 규제가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도리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홍종호 대한상의 자문위원 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하면서 국내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 11.1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한국경제

기사링크

(요 약) '5146억' 옵티머스 펀드, 대부분 날려…회수가능액 401억~783억 불과

- 5146억원 가운데 많게는 15.2%(783억원), 적게는 7.8%(401억원)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
- 최종 투자처에 들어간 3515억원 중 회수가능성 A등급 45억원 (1%), B등급은 543억원 (15%), C등급 2927억원 (83%)

투자자들 돈이 5000억 넘게 몰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가운데 최소 401억원에서 최대 783억원만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회계실사 결과가 나왔다. 회수율로 계산해보면 7.8%~15.2%에 불과하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펀드 설정금액 5146억원은 1·2차 도관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과 혼재돼 최종 투자처에 투자되거나 기존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로, 금액으로 보면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3515억원 중 1277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투자됐다. 부산 개발사업 224억원 등 진행 중인 사업에 590억원, 중고차매매단지 159억원 등 미진행 사업에 687억원이 들어갔다.

1370억원은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 S사 등 상장기업 지분 투자액 1226억원, D사 등 비상장기업 지분에 144억원이 투자됐다. **기존 투자한 상장기업은 현재 대부분 상장폐지됐거나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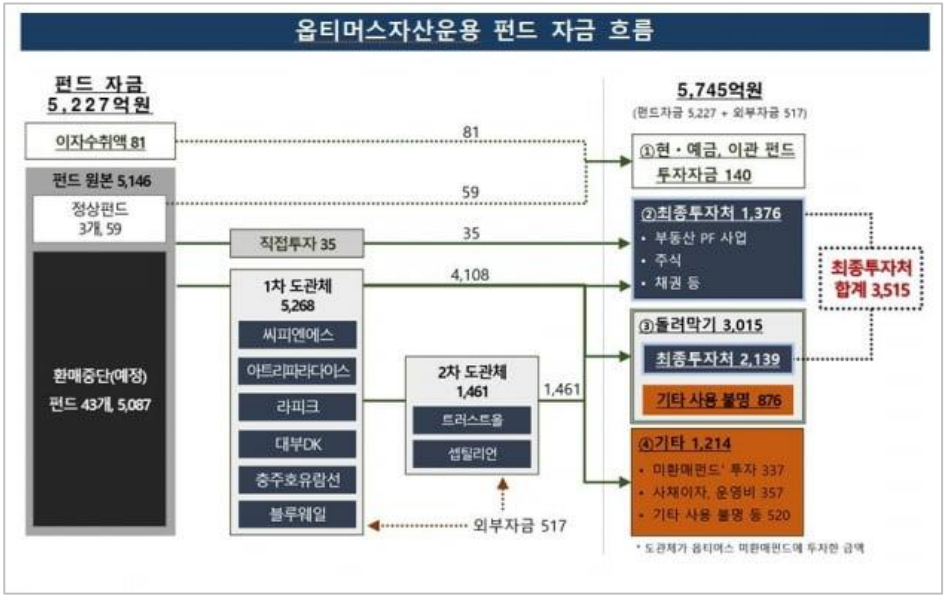
724억원은 채권을 샀다. H산업(234억원) 등 관계 기업 등 대여 500억원, 기타 일반기업에 대한 대여 등으로 224억원이 쓰여졌다. 이 밖에도 콘도미니엄 수익권 등에 145억원이 투자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수가능성에 따라 자산을 ABC등급으로 구분하고 자산별로 예상 회수율을 냈는데, **총 46개 펀드 설정금액 5146억원 가운데 많게는 15.2%(783억원), 적게는 7.8%(401억원)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46개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81억원), 이관대상 3개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59억원)은 모두 A등급으로 분류됐다. 해당 자산은 투자액 모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종 투자처에 들어간 3515억원이다. 3515억원 가운데 A등급은 45억원으로 1.3%, B등급은 543억원으로 15.4%, C등급은 2927억원으로 83.3%로 분류됐다. A등급은 35억~51억원을, B등급은 226억~337억원을, C등급에서는 0억~255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삼일 측은 판단했다. 다만 일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PF사업건이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감원은 기준가격 조정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자산실사 결과 자금사용처가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사결과는 나왔지만 손해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검사수사 결과 등을 감안해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분쟁조정 방안도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옵티머스펀드엔 투자자 1166명(개인 982명·법인 184명)이 가입했으며 개인 2404억원, 법인 2747억원을 투자했다.



2020. 11. 12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 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053111

(요 약) 태양광 발전 뛰어든다는 한전...업계 "다 죽을 판"

-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에 한전의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국내 보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 연간 의무구입 비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REC발급량이 늘어나자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민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수요 대비 넘쳐나는 상황에서 한전까지 시장에 진출하면 민간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 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 진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 월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법상 한전은 송·배전 및 전기판매 사업만 할 수 있다. 2001 년 발전과 판매를 분리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이후 전기 발전은 한전 6 개 발전자회사 및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한전의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국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전력유통(송·배전망)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들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 의도대로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민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선 여당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급락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가격(현물 기준)은 3 만 9100 원으로, 3 년 전(12 만 7300 원) 대비 30% 수준으로 폭락했다. 올 들어 매달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REC 는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1REC 는 1000 kW의 전기를 생산한 가격을 뜻한다. 22 개 공급의무자(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맞추기 위해 REC 를 의무 구입해야 한다. REC 는 전력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기도 한다. 산업 현장에서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REC 판매는 민간업체의 최대 수익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발전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연간 의무구입 비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REC 발급량이 크게 늘어나자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다. 민간업체 관계자는 "REC 가격 하락으로 수익은커녕 원가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2020. 11. 12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 처) 중앙일보

https://v.kakao.com/v/20201112000451893?from=tgt

(요 약) 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 않기로

-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금감원은 소수의 투자자가 시세를 조종, 개인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소형주의 경우 공매도 제한이 필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 월 15 일 이후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소형주 공매도 제한 방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11 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내년 3 월 15 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 기간 중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 시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 종목이나 특정 기간에 한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홍콩식 공매도종목 지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배치된다. 금감원은 당시 "**소수의 투자자가 시세를 조종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소형주의 경우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종목 간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을 내세웠다.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종목 간 형평성, 기준의 적정성 등 새로운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홍콩은 공매도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공매도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다"며 "한국이 공매도 전면 허용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바꿀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해 국내 시장의 신뢰 저하 및 투자자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대신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참여 확대 ▶시장조성자 제도 보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출했다. 처벌 강화 방안은 불법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에게 1 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 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2020. 11. 1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이투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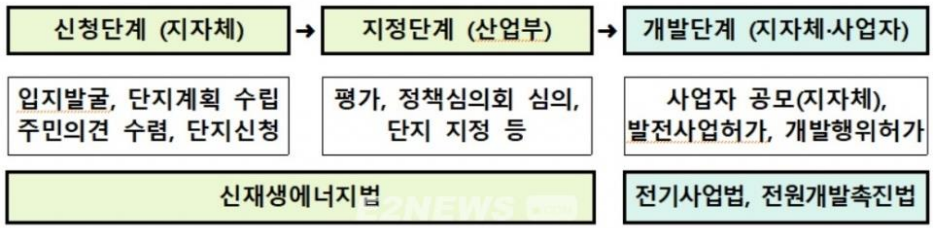
기사링크

(요 약) 지자체 주도 신재생 집적화단지 본격화

-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자체 주도로 조성 가능
- 집적화단지 추진 시 계획수립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 확보 필요… REC 가중치는 최대 0.1

앞으로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려면 계획수립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가 최대 0.1까지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변전시설, 운영시설 등을 집적화해 구축한다. 집적화단지가 시행되면 지자체 주도로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개발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된다. 계통연계 및 풍황계측기 설치를 통한 타당성조사도 우선지원하고, 해양공간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반영 및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한 인허가 의제처리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 및 제공한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구축을 위해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다. 산업부는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집적화단지를 추진할 때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신재생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역사회·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본격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수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풍력발전단지는 대부분 사각형 형태지만 계측기 유효지역은 원형으로 규정돼 효율적인 단지배치에 제한이 있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계측기 우선권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가 있는 경우 유효지역을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100㎢까지 할 수 있다. 이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한 80㎢로 설정할 수 있다. 고시 개정에 따라 풍황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풍력단지를 배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해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 11.13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이투뉴스

기사링크

(요 약) 한화큐셀, 평창에 40MW급 풍력발전소 추진

- 한화큐셀, 평창군과 40MW급 풍력사업 MOU 체결… 발전소 EPC 담당 예정
- 태양광셀 및 모듈 뿐만 아니라 풍력사업과 ESS, EPC, 전력판매사업 등 토털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비전 수립

한화큐셀(사장 김희철)이 ESS, 전력판매사업에 이어 풍력발전사업에도 진출한다.

한화큐셀은 9일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평창군(군수 한왕기),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태환(사장 이기경)과 평창지역 풍력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번 MOU는 평창군에 조성될 **40MW급 풍력발전소 등 평창군 내 풍력사업**에 대한 협업이 담겼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창군은 산악관광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사업 참여사들은 지역사회 소득증진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민간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풍력발전사업 행정지원을 한다. 중부발전은 사업개발지원과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전량 구매하고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에 참여한다. 한화큐셀은 풍력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를 맡고, 태환은 인허가 등을 포함한 사업개발을 주관한다.

한화큐셀은 그간 태양광셀과 모듈사업에 집중했지만 지난 1월 토털에너지 솔루션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비전 수립 후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한화큐셀은 풍력사업을 비롯해 ESS가 결합된 태양광솔루션사업, 발전소개발사업, 전력판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및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기반 태양광연계 에너지저장장치 공동개발 및 사업 전개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8월에는 미국 에너지관리시스템기업 젤리를 인수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미래형 에너지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솔루션 내 케미칼과 첨단소재 부문 등 그룹 계열사들과 협업해 그린수소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은 "한화큐셀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 중"이라며 "풍력사업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협약 참여사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